

보도	2024. 12. 31.(화) 조간	배포	2024. 12. 30.(월)		
담당부서	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	책임자	팀 장	송상욱	(02-3145-8242)
		담당자	조사역	이만영	(02-3145-8247)

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·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.

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,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
 -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,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* 및 표준사업방법서**를 개정합니다.

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

**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

개정사항 주요내용

㉠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

- (현행)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(부모님)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여,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- (개선) 보험금 대리청구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(예: 모바일인증)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.

㉔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

- **(현행)**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 계약에서,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, 근로자 유족 및 기업간에 보험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.
- **(개선)**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'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'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하여,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㉕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

- **(현행)**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, 표준약관은 이를 '일시납'으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.
- **(개선)**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'잔여 보험료 납입기간' 또는 '5년'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㉖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

- **(현행)**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(직권해지)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하였습니다.
- **(개선)**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등 표준약관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.

㉗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

- **(현행)**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하나,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(예: 직전 3개월)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.
- **(개선)**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(예: 4.1일의 '최근 3개월 이내'는 1.1일부터 4.1일까지)과 예시를 신설하였습니다.

1 주요 개정사항

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(표준약관 개선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* 등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 시에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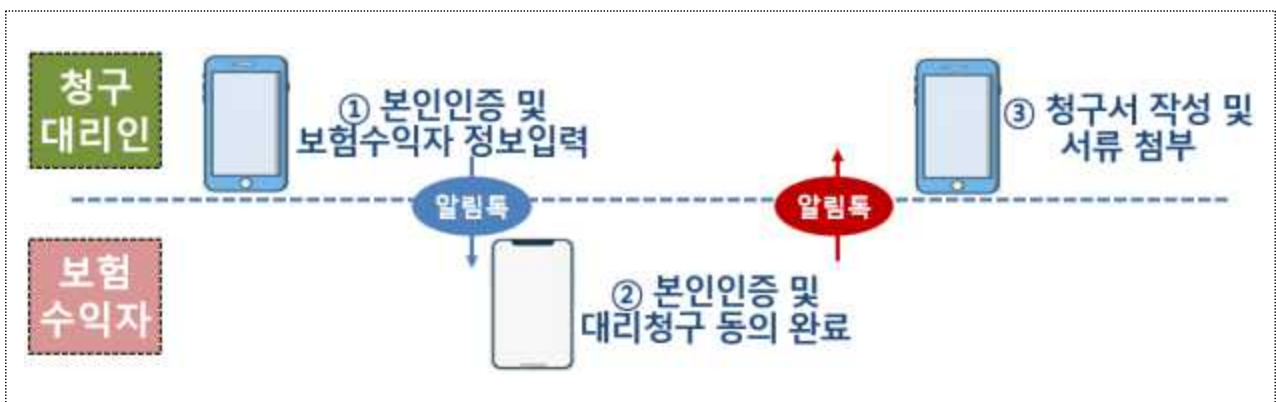
*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타인의 보험금 대리청구 서비스 제공 중

□ **(개선)**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 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하여

-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 (예: 모바일인증)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* 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코로나 시기(22년) 중 주민센터 방문이 곤란하여 모바일 인증을 통한 보험금 대리 청구가 일부 허용되었으나, 표준약관 미개정으로 아직 많은 보험사는 동 서비스 미제공

모바일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도(예시)



나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[표준사업방법서 개선]

- (현황 및 문제점) 기업 등(5인 이상 단체)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, 후유장애,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, 근로자 또는 기업*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.

* 상법(§735의3③)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계약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 '근로자를 피보험자'로 하고 '기업을 수익자'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가입 가능

-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(또는 사업주)으로 지정*되는 경우,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

* '23년말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6만건으로, 그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41만건

-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.

단체보험의 보험금 수령 구조(기업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)



- (개선)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* 계약시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하여 근로자의 유족**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며, 사망담보 이외의 담보는 현행과 같이 기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

** 판례는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(2007다70285)

- 이를 통해 기업(단체)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*

* 기 계약된 단체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에 따라 결정(기업 또는 근로자)되며,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

제도개선 후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 예시

보장담보 \ 보험수익자	기업(보험계약자)	근로자(피보험자)
업무상재해	○	○
업무외재해	×	○

다 직업 변경시 준비금 정산액 분할납부 방안마련 (표준약관 개선)

- (현행 및 문제점)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 사고위험*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,

* (예시) 직업변경(사무직→건설기계 운전사), 직무변경(사무직→현장 기술직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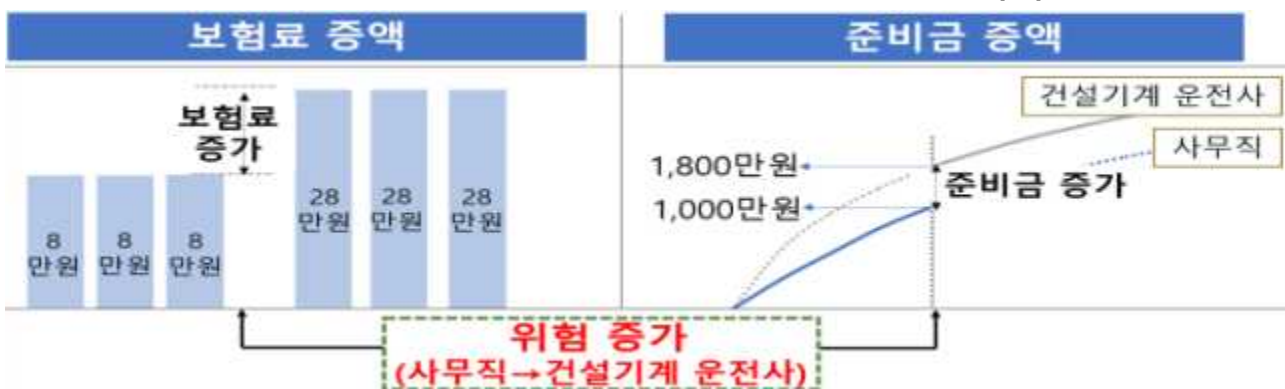
-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, 위험변동 후 보험료가 증가(또는 감소)되고,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*(납부환불)해야 합니다.

*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시 정산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고,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이직시 보험사로부터 정산액을 환불받음

- 그러나, 현행 표준약관은 책임준비금 차액의 '일시납' 정산만 허용하고 있어,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*에 달하는 정산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.

* '23년 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최대 준비금 정산액은 913만원

피보험자 위험증가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증액(예)



- **(개선)**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일시납 이외에 분할납부*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 하였습니다.

* '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'5년'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하여 분할 납부(갱신형 보험은 제외, 세부 기준은 회사별로 상이 가능, 분납금액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이자 가산)

- 아울러, 현재 상해보험 등*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도 직업 변경시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'23년 말 기준 상해·질병보험 보유계약 건은 약 9,998만건

제도개선후 선택권(②) 추가 예시

구 분	직업변경 前	직업변경 後	
		①일시납+보험료조정	②보험료조정
보험료	8만원 (과거 5년 납입중)	28만원 (장래 14년 납입)	33만원 (장래 14년 납입)
준비금정산액	-	816만원*	-

* 제도개선 이전에는 816만원을 일시에 정산해야 하였으나, 제도개선 이후에는 정산액 발생시 분할납 가능(기존에 가입한 계약에서도 직업변경시 분할납 선택 가능)

라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[표준약관 개선]

- **(현행 및 문제점)**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“해지청구일~지급일” 기간의 지연이자*를 부리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*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토록 하기 위한 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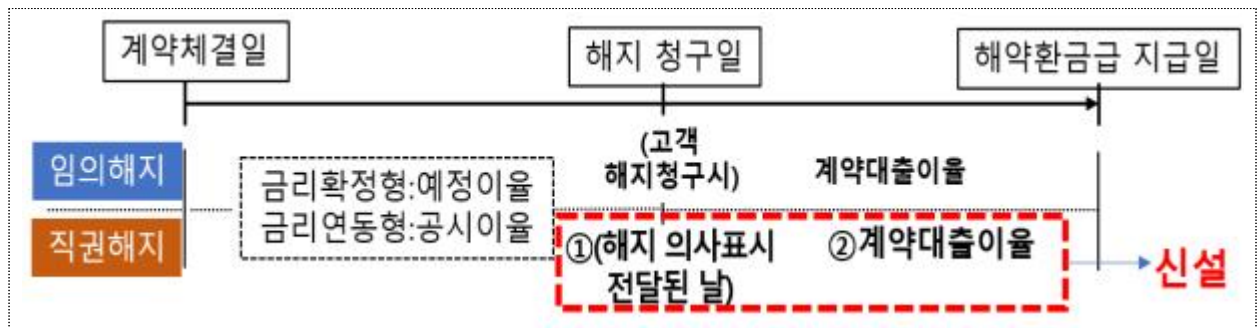
- 현행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해지의사에 따른 해지(임의해지)의 경우 적립이율(계약대출이율) 등 지연이자 계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,
-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(직권해지)할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, 보험사별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.

- **(개선)**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*을 ①이자 기산일로 하고,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②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

*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50712 판결 中 "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(또는 대리인)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"

-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화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기대합니다.

개선 이후 해약환급금(계약자적립액) 적립이율 기준



마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 명확화 [표준사업방법서 개선]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보험가입자는 '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(고지사항)'으로 '정해진 기간 이내'(고지대상 기간)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.

- 그러나,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(예: 직전 3개월)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고지대상 기간의 ①시작일과 ②종료일(청약일 포함 여부)에 대한 가입자의 혼선 및 분쟁*이 지속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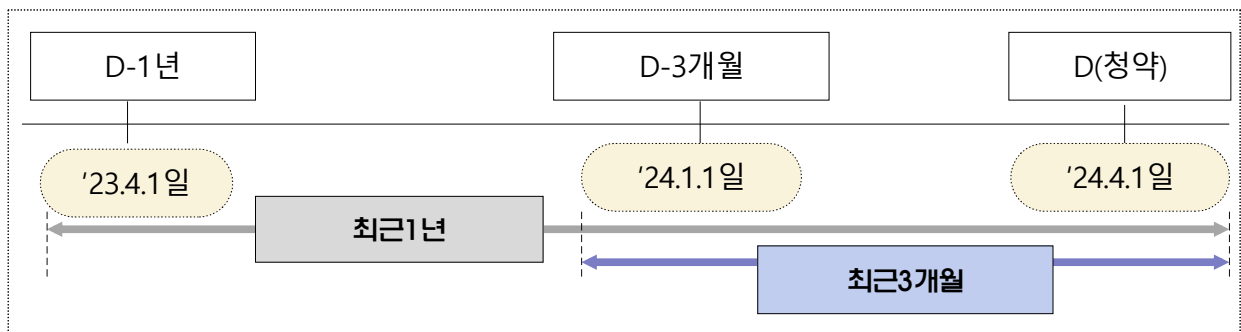
* (예) 피보험자는 '24.7.8일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합병증 검사 필요소견을 듣고 '24.7.8일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'24.10.8일에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였으나, 보험사는 '21.7.8일도 고지기간으로 판단

- (개선)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*을 제시하고, 관련 도표를 신설하였습니다.

* 이 청약서에서 '최근 ○개월 이내(◆년 이내)'는 청약일의 ○개월 전일(◆년 전일)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.(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'최근 3개월 이내'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)

-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되고,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고지대상기간 관련 도표



2 | 향후 계획

- 단체보험^[개정사항 '나'] 관련 개선사항(은 '25.1.1.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,
- 보험금 대리청구^[개정사항 '가'], 직업변경 정산금^[개정사항 '다'], 직권해지 지연이자^[개정사항 '라'], 고지대상 기간^[개정사항 '마'] 관련 개선사항은 '25.4.1. 보험약관부터 적용 예정